

‘반도체 전쟁’

반도체산업경쟁력법안 공개... 전국 지자체들 경쟁 본격화
광주·전남, 특화단지 조성...과기위 국회의원 없어 아쉬움

광주·전남 등 전국 자치단체들의 반도체 대전(大戰)이 시작됐다. 여당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 공개를 기점으로, 반도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전국 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공동으로 반도체특화단지 조성을 비롯한 한전공대와 AI(인공지능) 반도체 등을 묶는 등 다양한 전략으로 추격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지만, 관련 기업투자 유치성과가 전무하고 미래산업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지역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히고 있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인재 양성고 기업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공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건을 묶는 패키지 법안으로,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맞을 올린 것이다.

광주시·전남도도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맞춰 광주·전남 공동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는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지역 상생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시·도는 광주시와 조성 인접지역에 1000만㎡ 규모의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반도체 산업의 필수 요소인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시·도는 조만간 지역 대학들과 공동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인력 양성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삼성전자 상무를 지낸 무소속 양항자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큰 힘이 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개교한 세계적

수준의 한국에너지공대, 인공지능(AI) 선도대학인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도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끌 동력이 되고 있다.

물론 대내외적 여건도 만만치 않다. 특히 광주·전남과 함께 반도체 산업을 추격던 인천과 충청 등의 추적이 매섭다.

충청권 대표주자인 대전은 ‘노·반도체산업 육성 비전’을 선포하고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했고, 대구·경북은 구미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강원도는 아예 삼성 전자 부사장 출신을 경제부지사로 영입하고,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까지 열었다. 인천은 그동안 다양한 인센티브 전략 등을 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1600개를 유치하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놓은 상태다.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30%)와 비메모리반도체(70%)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굳히고 있는 반면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의 핵심인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선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해 ‘비메모리반도체’ 부문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광주·전남은 일단 메모리·비메모리반도체 분야를 모두 열어두고 타 지역과 경쟁에 나서는 한편 인공지능 중심도시인 광주의 강점을 살려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광주·전남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계획은 있지만, 기업유치와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치밀한 분석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반도체 산업은 다양한 산업과 기술이 모여야 가능한 산업으로,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교육·의료·문화·일자리·교통·정주여건 등을 모두 고려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광주·전남은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뒤지는 현실부터 인식하고, 이를 반영한 비전과 로드맵을 구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평호수공원에서 여름밤의 낭만을...” 2일 광주 서구 풍암,운천호수공원과 함께 3대 공원중 하나로 꼽히는 매월동 전평호수공원이 최근 야간 조명작업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여름밤의 낭만을 선물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전남 7월 물가 7.3%

광주 6.6·전국평균 6.3% 상승
외환위기 이후 23년 만에 최고

광주·전남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가뭄 등 기상여건 영향을 크게 받은 광주와 전남은 전국에서 각각 농축수산물, 외식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광주 6.6%·전남 7.3% 상승했다.

이 상승률은 지난 1998년 11월(광주 7.4%·전남 8.2%)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다.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6.0%)에 이어 7월(6.3%)에도 6%대를 나타내고 있다.

체감물가를 가늠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광주 8.7%·전남 9.0% 상승했다.

전남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 9%대를 나타내며 두 달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광주 9.2%·전남 5.3%로, 광주는 석 달 연속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다.

임상문 호남통계청 물가조사팀장은 “7월 돼지고기와 수입 쇠고기 가격이 크게 오르며 휴가철 밥상물가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지난달을 정점으로 물가 상승 폭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미·영·프 “북한 CVID에 전념” NPT 회의서 북핵 우려 쏟아졌다

7년 만에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쏟아졌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위협과 원전 공격, 이란의 핵개발과 함께 중대한 핵확산 문제로 언급된 것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북아일랜드는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NPT 평가회의에 앞서 공동 장관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계속된 진전이 우리 공동의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에 추가로 주목한다”고 밝혔다.

서방 주요국은 성명에서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가진 모든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 그리고 관련 활동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U 측은 “북한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추구에 목표를 둔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와 의미있는 논의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결식아동 한 끼 급식비로 한 끼 못 먹어 ▶6면
‘광프리카’ 가마솥 더위에 불쾌지수 최고 ▶7면
건축과 도시를 바꿔라 - 탈 자동차 ▶22면

전라남도

남도여행의 즐거움이 커지는 전남사랑도민증 신청하세요

신청바로가기

검색창에 **전남사랑도민증** 검색